

더원협, 윤석열 불기소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침묵하는 검찰의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 성공하기 어려워
국민의 검찰되려면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나가야

-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협의회장 김현정, 이하 더원협)은 4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더원협은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 이라 발표한 것이 윤석열 봐주기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였다’ 고 지적하고, ‘검찰의 윤석열 후보 구하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우진 청탁 무마 사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에 더 큰 문제’ 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더원협은 “각종 범죄 의혹으로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등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면서,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측근에게만 관대한 공정 앞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고 걱정했다.
- 끝으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침묵하는 검찰의 윤석열 구하기 프로젝트 성공할 수 없다” 면서 검찰에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나갈 것” 을 강조했다.

- 더원협은 김현정 지역위원장(평택을)이 협의회장을 맡아 제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현정 위원장, 남영희 지역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동기 지역위원장(속초·고성·양양), 강운경 지역위원장(부산 수영구), 문명순 지역위원장(경기 고양갑), 이정근 지역위원장(서울 서초갑), 이덕춘 더원협 법률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끝)

윤석열 후보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을 규탄한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 윤우진 수사무마의혹 불기소 규탄 및 김건희 소환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

검찰은 지난 12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중” 이라 했는데, 윤석열 봐주기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윤우진 사건은 윤석열 사단에 포획된 검찰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대운 소운으로 불리던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윤석열 후보 구하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우진 청탁 무마 사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에 더 큰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 캐비닛은 윤석열 후보 본인과 그를 둘러싼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김건희 씨는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위조 등을 통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전주 의혹,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 의혹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시효” 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등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공정과 정의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그 칼날의 날카로움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본인에게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 그리고 본인 측근에게만 관대한 그의 공정 앞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 역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이 아닌지, 윤석열 등 뒤에만 서면 수사는 왜 미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대단한 사랑 때문에 검찰 공화국의 수장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고, 대통령 후보의 장모라고, 대통령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여, 추상 같은 법의 집행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에 의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의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나가야 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첨부2 : 기자회견 사진]

